

한라포커스 제주도-국방부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 갈등

국방부가 당장 준다 해도 못 받는다

국가 소유 재산 처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기재부 "제주특별법상 무상양여 근거는 효력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만든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 근거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라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정을 짚었다.

▶국방부가 줘도 못 받는다=제주도는 2008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749억원을 들여 격납고와 진지동굴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제주도는 2011년 국회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조문에 나온 '서귀포시 관할 구역 국유재산'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을 가리킨 것이었다. 알뜨르 비행장은 평화대공원 부지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주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자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십수 년째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대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에도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입장을 바꿔도 제주도는 이 땅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제주특별법에 나온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 근거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가로 막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10년간 허상 쫓았나=알뜨르 비행장처럼 국가 소유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

한법(이하 특례제한법)을 적용 받는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지자체나 개인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용 목적이 도로·공원 조성 등 공익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국유재산을 넘겨 받을 수 있다.

특례제한법은 이같은 국유재산 무상 사용·양여 조건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영양교육도시를 들

수 있다. 특례제한법은 '별표'에 의한 위임규정을 뒤 제주특별법 184조에 따라 국제학교를 유치·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특례제한법이 다른 법으로는 이런 특례를 정할 수 없게 못박고 있다는 것. 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된 시기는 2011년 4월로,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 근거를 신설한 제주특별법보다 1개월 먼저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상민기자 >> 2면으로 계속



가을은 아직 멀었는데... 22일 제주시 용연계곡 산책로 인근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민기자

올해 첫 추경안 6조2310억원 편성

도, 당초예산 대비 4011억 증액... 21일 도의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예산보다 4011억 늘어난 6조231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는 3346억원(6.8%)이 증액된 5조2393억원을, 특별회계는 665억원

(7.2%) 증액된 991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5조8299억원과 비교하면 6.9% 증액된 4011억원(6.9%)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한 국판 뉴딜 대응과 선제적 제주형 뉴

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에서 각각 524억원, 992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재원에서 1830억원이 증가해 3346억원의 재원이 확보됐다.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목적사업 등 505억원(전출금 385억원 포함),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862억원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916억원으로 편성됐다. 강대해기자

제주, 정부 공공기관 유치 '늑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차 지방 이전 추진 피력
 타 지자체 쟁탈... 도 대응 늦어 경쟁에서 밀려

정부가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다시 불을 당기면서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대응이 늦어 유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사열 위원장은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현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주지역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TF를 조직해 유치 대상과 이전 후보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주 유치에 적합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명시되면서 유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TF는 해를 넘겨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꾸러진 데다 위원 위촉, 회의 등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 실적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위한 TF를 이미 구성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금융·공공기관 등을 타깃으로 선포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 이 재보선 과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룡시 등 충청남도 역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입장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원 지사,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제안

원희룡 지사가 전국 시·도지사에 일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원 지사는 지난 23일 전라북도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해양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준비단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

19 사태 속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정과제 이행(지방재정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향상 등),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책임성 강화, 중앙기능 지방 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대해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935
 23일 18시 기준

4·19혁명 61주년기념

4·19혁명 세계화 전진대회 및 합창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행사개요

- ◎ 4·19혁명 퍼포먼스
- ◎ 세계화 퍼포먼스
- ◎ 4·19혁명 세계화 전진대회
- ◎ 419명이 4·19노래 온라인 합창
- ◎ 어울림 한마당
클래식, 트로트, K-POP, 가곡
- ◎ 경품 추첨

4·19혁명 세계화전진대회

대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고문 박중구
 (4·19민주혁명회 회장)

부대 회장 박영식
 총괄본부장 김선담
 기획본부장 양영식
 후원본부장 신광성
 대외본부장 송창달
 운영본부장 박훈
 여성본부장 홍관옥
 지원본부장 이재영
 진행본부장 김중석
 홍보본부장 전대열

미안마 군부는 민주화를 외치는 자국 국민을 살상하지 말라!!

4·19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갑시다!!

일시 : 2021년 7월 2일 (금) 14:00 장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대강당 주최 : 4·19혁명공로자회 후원 :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